코로나 틈타 '외국어선' 불법조업 기승

서해해경, 비접촉방식서 나포·압송 전환 강력 대응

코로나 차단 위해 전용부두 '클린 조사실' 운영 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코로나 정국을 틈타 서해해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나포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해해경은 올 들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나포 등 직접 단속보다는 영해 침범을 차단·퇴거시키는 비접촉 방식으로 해상 경비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가을 조업철로 접어들면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기존의 나포 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서해해경은 이번 주부터 무허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접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위법정도가 심한 외국어선의 경우 나포·압송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코로나19'의 감염 차단과 예방을 위해 코로나 대응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해경은 단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검거된 외국 선원에 의한 코로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경 전용부두에 '클린(Clean) 조사실'을 마련했다.

또 나포된 어선에 의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신속한 검역과 방역을 진행하기 위해 군산·목포의 검역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서해바다를 지키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운영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대표 "앞으로도 계속 신상공개 할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사이트 운영자에게 1심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 판사는 "강 대표가 고소인에 대해서 올린 '스키강사 출신'이나 '사업가'라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그런 허위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해당 내용들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했으며 강 대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으나 사무국장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과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과의 통화에서도 양육비 지급 필요성 만을 강조하고 분노 등 사적 감정을 토로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무죄라는) 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의 이름과 얼굴 등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공개하며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방하고 욕보이려는 목적이 아닌 오로지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서 감사하다"며 "단 한명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을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가운데)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감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상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확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광산구의원 또 갑질 시비, 윤리특위가 제명하나

"공직자들에게 폭언 일삼고 식사비 지불 강요했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공직자에게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한다.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9일 상습 갑질·이권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상현 의원의 입장과 의견을 들었다.

조 의원은 "일부 공직자들에게 거친 어투로 말한 건 사실이다.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조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과거 3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고려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안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식사비 지불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이용을 요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해당 카페 주변에 같은 업종 가게가 생기는 것을 막는 등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와 도마 위에 올랐다.

관용 차량을 병원 진료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조 의원은 2016년부터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인격 모독 등으로 이미 3차례나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폭언 의혹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 29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이 폭언 의혹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음달 16일 윤리위에서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임형택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불법체류자 검거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캄보디아 국적 A(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동구 소태동 술집에서 북구 두암동 한 도로까지 5km가량을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053%(운전 면허 정지 수치)상태로 차량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 면허가 없는 A씨는 한국에 귀화한 친척 소유의 차량을 빌려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변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공원화장실에 불 피우다 경찰관 행패까지 한 50대 영장

출소 직후 노숙을 하던 50대가 공중화장실에서 불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에 행패까지 부려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불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공원 내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이를 만류하는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7일 교도소 출소 직후 공원 화장실에서 노숙하다 불을 피웠으며, 출동한 경찰에 저항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꺼져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수산시장 내 사무실서 불…인명피해 없어

29일 오전 5시11분께 전남 목포시 동명동 수산시장 내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실내 공간 33㎡가량이 타거나 그을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교사 7명 신체 몰카 촬영' 고교생 퇴학 조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사진 등 촬영해 갖고 있다가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교사 7명의 신체가 찍힌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도 담겨져 있었다.

A군은 이 사건 범행 전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벌여 전학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서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들이받은 20대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술을 마시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사거리에서 인천대학교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통섬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